



의안번호

제44호

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4. 12.

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4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4. 12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생활밀착형 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항 내용 변경 필요와
 - 논산시 하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(고정비율→일할계산)
 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임(제2018-205호)
-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와 국민 불편 자치법규 정비개선(이의신청 및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)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목을 개선 내용과 맞도록 변경하고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(채납액의 2%)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개선(안 제28조)
- 나. 이의신청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(안 제27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- (1) 논산시 소비자정책 위원회 : 대상 아님
 - 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(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(4) 규제심사 : 대상아님

(5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 : 2019. 2. 15 . ~ 2019. 3. 7.

(나) 결 과 : 의견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7) 충청남도소관실과 : 물관리정책과 (☎041-635-2733)

□ 개정조례안

조례 제 호

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법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한다)”으로 하고, “제7조”를 “제11조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중지 중”을 “중지중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「하수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한다)”를 “영” 이라 한다.

제11조제1항2호 중 “규칙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 이라한다)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1조제1항”을 “법 제6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90일”을 “6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”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 (가산금 및 독촉)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

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달 하수도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.

$$\text{가산금} = \text{미납요금} \times 2/100 \times \text{연체일수/월력(月曆)일수}$$

제29조의 제목 “(지방세법의 준용)”을 “(지방세징수법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법」의 예에”를 “징수는 「지방세징수법」을”로 한다.

제31조 중 “규칙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맑 은 물 과 장	박 찬 택
	수도행정팀장	임 성 영 (041-746-635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「하수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(하수관로를 말한다)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.	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-- ----- ----- 「법 시행령」(이하"령"이라 한다), 제11조의 규정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「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」(이하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논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3조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·중지·폐지하거나 <u>중지</u>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	1. ----- ----- <u>중지중</u>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	② ----- -----

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1. (생략)
2. (생략)
3. (생략)
4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

제11조(시장의 공사시행)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·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 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,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

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4. 영 제22조-----

제11조(시장의 공사시행)①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제23조에-----

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3항

-----.

1. ~ 7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27조(이의신청) ① 공공하수도
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
뇨 수집·운반 수수료, 원인자
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하여
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
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
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
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
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
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
다.

<신설>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이의신청) ① -----

----- 60일 -----
-----.
② -----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 및
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-----
-.

제28조 (가산금 및 독촉) ① 시장
은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
수도 점용료, 분뇨 수집·운반
·처리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
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
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
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
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다
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
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
있다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

	<p><u>부기한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</u> <u>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</u> <u>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 경과</u> <u>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</u> <u>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산식에</u> <u>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</u> <u>다음달 하수도요금에 감액하여</u> <u>부과한다.</u></p> <p><u>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</u> <u>연체일수/월력(月曆)일수</u></p>
제29조(<u>지방세법의 준용</u>) 공공하 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 료,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, 원 인자 부담금 <u>징수에 있어 이 조</u> <u>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지방</u> <u>세법」의 예에 따른다.</u>	제29조(<u>지방세징수법의 준용</u>) -- ----- ----- ----- <u>징수는 「지방세징수</u> <u>법」을</u> -----.
제31조(<u>시행규칙</u>) 이 조례에서 정 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</u> 으로 정 한다.	제31조(<u>시행규칙</u>) ----- ----- ----- <u>시행규칙</u> 으로 정한다.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 당 없 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3. 작성자

맑은물과장 박찬택

□ 하수도법

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, 배수구역(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,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,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(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)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(이하 "타행위"라 한다)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, 증설, 이설,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□ 하수도법 시행령

제11조(사용의 공고)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공공하수도의 위치
2. 공공하수처리시설·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
3.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(合流式) 또는 분류식(分流式)의 구분
- 3의2.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,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
4.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(이하 "공공하수도관리청"이라 한다)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"지방환경관서의 장"이라 한다)과 시·도지사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

다.

□ 지방세기본법

제118조(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)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(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·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21조(통고처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(確證)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벌금상당액"이라 한다)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, 추정

금,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·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(이하 "납부신청"이라 한다)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.

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6조(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참고 2

개선권고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(발췌)

☐ **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**

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

- 생활밀착형 상·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

☐ **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**

○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

-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 편의적 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요구